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 실제로 있습니다

2021-11-03 17:28 안준영 기자

병역·납세 의무 면제지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1953년 조성된 지역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과 남측 대성동 마을에 각각 인공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4대 의무. 그중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인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면제 되는 곳이 있다. 최북단 남측 비무장지대(DMZ)에 존재하는 유일한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지만,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다.

대성동 마을은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을 둔다'는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1953년 조성됐다.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DMZ에 있기에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쯤 되면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당장이라도 이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계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 당시 거주했던 주민들의 자손들만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주민들도 1년 중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 살지 않으면 주민권을 박탈당한다. 병역과 납세 면제 프리미엄이 날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을 주민이 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여자는 이 마을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면 된다. 남자의 경우 아들이 없는 마을 주민의 딸과 결혼해 데릴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는 군 면제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정한 규칙이다. 즉 병역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자격을 유지하거나 데릴사위로 들어가면 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 봉송주자인 대성초등학교 구현진 교사가 교정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 KT

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다.

주민들은 대부분 벼농사를 짓는데,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경작권만 있다.

행여 천안함·연평도 사건 같은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출입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마을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른다.

인근 통일촌과 해마루촌은 간단한 출입절차를 거쳐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성동 마을은 판문점과 달리 일반인 관광은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출입까지 통제된다. DMZ 안에 있는 데다 불과 200여m 거리에 북한군 초소가 있어 분단의 경계선과 가장 가깝게 맞닿은 곳이기 때문이다.

외부인은 마을 주민의 초대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것도 정해진 시간만 출입할 수 있다. 출입 시 JSA 민정중대의 경호를 받아야 한다. 마을 주민들도 출입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된다. 저녁 7시에는 민정중대가 가구별 인원 점검을 한다.

마을의 위치적 특성상 민정중대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치안 유지는 확실한 게 아이러니이다.

마을에는 2019년 기준 4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대성동초등학교 1개와 병설유치원 1개(5명)가 전부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인근 지역 중고등학교로 등하교해야 한다.

대성동초교 입학 자격은 마을 주민이어야 하고 외부인은 추천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육환경으로 외지에서도 인기가 많다.

교육과정은 일반학교와 동일하다. 다만 스쿨버스 출입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무료다.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도 특징이다. 학생들은 어린이 외교관, DMZ국제영화제 참가, 각국 대사관 공연 등 특별활동도 많이 한다.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대성동 마을 #DMZ #천안함

위키트리 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ocial News Co., Ltd. All Right Reserved.